



개나리꽃 핀 제주 6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공원 산책로에 이른 개나리가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도, 전국 최초 시행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손질

전기·소형차 등 총 18만여대 면제

다자녀가정 소유 1대 등 포함돼 기존 대비 51% 제외
주차 공간 부족한 원도심 등 '개선책' 제시 한계 지적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 18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 전 지역,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지 3년만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원도심처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린 6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7년 2월 제주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2022년 1월부

터 도내 전 지역, 모든 차종으로 전면 확대됐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제도 적용 대상 완화'다. 제주도는 경형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내 전체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36만7471대(지난해 7월 기준) 중에 13만4799대(36.7%)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두 명 이상(19세 미만 포함)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소유한 차량 1대까지도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소유한 차량도 가구 당 1대까지 제

도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포함할 경우 차고지 증명제 면제 대상은 전체 대상 차량의 절반인 18만7216대(50.9%)까지 늘어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도 시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1km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거리 기준이 2km로 변경된다. 최소 1년 이상 이던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도 폐지돼 실제 사용 기간 만큼 계약이 가능하고, 도내 등록 차량이라도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6개월마다 도의 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조정된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해 제주도는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 차량을 완화하면서 도내 청년, 저소득층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차면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해법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면수는 모두 48만 2878면으로 도내 자가용 승용차(36만7473대)보다 11만5405면 많지만 제주시 원도심인 일도2동과 용담1동, 삼도1동을 비롯해 화북동, 삼양동, 추자면, 서귀포시 효돈동, 서흥동 등 8개 지역에선 주차면수가 7822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도2동의 경우 부족한 주차면수가 3334면으로 차고지 확보 난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 2면으로 계속 김지은기자

을사년 연초 여행심리 '뚝'

제주관광객 5일까지 14만여명... 전년비 11.7% ↓
정국 불안에 여행기 참가 영향 내국인 14.7% 감소

새해 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안그래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탄핵정국에 이어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5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4만 292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7% 감소했다. 하루 평균 2만 8584명 꼴이다. 새해 첫날인 1월 2만 9373명이 찾은 것을 시작으로 5일까지 줄곧 3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내국인은 닷새 동안 12만 8382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7%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 관광객을 중심으로 26.5% 증가한 1만 4540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처럼 내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좌석 감소도 앞으로 관광객 추이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주-김포, 제주-부산, 제주-청주, 제주-무안 등 국내선 4개 노선의 838편을 감편하기로 결정했다

고 최근 밝혔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1대 중 39대가 189석의 B737-800임을 감안하면 이번 감편 결정으로 약 15만여석의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제주공항의 항공사별 수송 분담률은 대한항공이 18.0%로 가장 높고, 제주항공이 16.7%로 두 번째로 높다. 이어 아시아나 16.0%, 진에어 14.3%, 티웨이 13.6%, 이스타항공 9.5%, 에어부산 9.0%, 기타 2.9% 순으로 2개 대형 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 66.0%를 차지한다.

예년 같으면 1-2월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 수요가 늘어날 시기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내국인의 항공 수요가 줄면서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제주 노선의 국내선 주중 요금의 경우 비선호시간대에는 2만~3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여행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걸 현장에서 체감하게 된다"며 "이달 말 다가오는 설 연휴도 주말과 연결되지 않고 주중이어서 당분간 눈에 띄는 여행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농지 개량 사전 신고해야"

올해부터 농지를 개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흙을 쌓아 올리

는 '성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사전 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다. 이때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한 해 되세요 福

한 해 동안 세기건설과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임직원 모두는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2025년이 되기를 세기건설이 응원하겠습니다.

世紀建設株式會社

